朴, '영장심사 1호 전직 대통령' 될까

변호인단, 대응 자제 분위기… "직접 출석 어려울 것" 관측… "서면 통한 반박 의견 주장 가능성도"

오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낼지 법조계 안팎에서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하기 위해 법원에 나온다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시행하기 2년 전인 1995년 구속돼 법관의 심문 없이 서면심사로 구속이 결정됐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에 출석한다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1호 전직 대통령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출석 여부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채명성 변호사는 이날 뉴시스와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정상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미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입장에서 새롭게 주장할 내용이 많지 않다는 점과 검찰 소환조사 때와 달리 경호상 문제가 어려운 점 등이 이유로 꼽히고 있다.

또 첫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부담도 상당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열린 헌법재판소 최종변론에서 서면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과 비슷하게 검찰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는 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판사에게 밝히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통상 사례로 비춰볼 수 없는 이번 사안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실제 법원에 나가겠다고 결정하기가 여러 정황상 쉽지 않을 것"이라며 "탄핵심판 당시 헌재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같은 방식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반면 법원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출석하지 않으면 심사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분위기를 내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모습을 드러내 동정 여론을 형성해 지지자들을 결집할 수 있는 효과도 감안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담당 판사는 서면만으로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발부받은 구인장으로 강제집행에 나서 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데려오거나 법원이 심문기일을 한 차례 연기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전반적인 법조계 분위기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31일 새벽에나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뉴시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 선출 바른정당은 28일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유승민 의원을 선출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제19대 대통령후보자 선출대회를 열고 유 의원을 후보자로 확정했다. 바른정당은 정의당에 이어 두번째로 대선후보를 결정했다. 유 의원은 국민정책평가단 투표(40%), 당원선거인단 투표(30%), 일반국민 여론조사(30%)를 합산한 결과 총 3만6593표를 획득, 2만1625표를 얻은 남경필 경기지사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 "유실방지 대책 재점검을"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가족들은 28일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유실 방지 대책 재검점과 함께 9명을 모두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이날 오후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서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가족들은 '유실방지 대책 재점검' '정밀 수색' '최우선적 수습' '세월호 신속 이동' 등을 강조했다.

가족들은 "목포 신항으로 세월호를 빨리 옮겨달라"며 "특별법이나 선체조사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9명을 모두 찾아달라. 머리카락 하나, 손톱 하나까지 다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또 "배수하는 과정에 미수습자 시신이 나올 것이라 미리 예측했어야 했으며, 배수 작업도 유실되지 않게 천천히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가족들은 "해역 수색·유실 방지 방법 등 어떤 식으로 몇 팀을 투입해 수색하고, 온전히 9명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공개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목포 신항으로 가는 상황에도 유실될 우려가 있다"면서 "직접 유해 발견 현장을 찾아 어떤 상황인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차관은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와 해경이 (검시를 위해)들어갈 때 같이 갈 수 있으면 가시죠"라고 답했다.

윤 차관은 이어 "일단 작업은 중지시켰다. 선체조사법에 관계없이 우선 최단 시간 내 세월호를 목포로 옮기려 한다"며 "배수는 안 하려 한다. 펜스를 다 쳐놨고 옮긴 뒤 선체 아래쪽 부분 등에 대해 점검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25분께 반잠수식 선박 갑판 위에서 미수습자 추정 유해 6개(크기 4~18㎝)가 발견됐다. /뉴시스

국회 안행위, 인수위법 통과

5월 9일 선출되는 19대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구성을 통해 국정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에 한해 특례규정을 두고, 임기 개시 후 45일의 범위 내에 국정인수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같은 특례규정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장관 등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시스

김승환 "학교시설, 학생 외에는 비개방이 원칙"

국회 '학교 개방법' 제정 움직임에 반대… " '방과후 교장' 도 학교 혼란 초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학교시설은 학생 외에는 비개방이 원칙"이라며 최근 국회에서 입법예고한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장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또 모든 학교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방과후 교장'을 두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임명토록 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학교시설은 개방이 원칙이 아니다. 아이들 외의 사람들에게는 비개방이 원칙이다"고 강조한 뒤 "다만 아이들이 사용하고 나서 여유가 있는 부분을 제한적으로 개방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특히 퇴직 교원을 선발해 '방과후 교장'을 따로 두도록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릴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일본의 내년 고교 사회과 검정 교과서에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이 대대적으로 기술된 것과 관련 "박근혜 정권이 한국의 역사를 일본에 팔아먹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김 교육감은 "일본이 공개한 고교 사회과 검정교과서 검정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일본 교과서들이 10억엔 거출금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한다. 불가역적 합의라는 게 하자가 있든 없든 되돌릴 수 없는 합의라는 뜻이다. 전적으로 일본에 유리하게 합의를 해준 박근혜 정권은 친일정권이다. 그리고 교육부는 일본 문부성의 세종출장소 역할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육감은 "정부가 바뀌면 12.28합의를 전면 폐기하는 작업을 꼭 해야 한다"며 "교육계에서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문재인 "초미세먼지 기준 신설하겠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기준마저 없던 초미세먼지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최소 선진국 수준, 최대 WHO 권고수준까지 강화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이를 둔 부모님이 아침에 일어나 맨 처음 살펴보는 소식이 미세먼지 농도다. 정부는 미세먼지 가이드라인 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기준을 별도로 엄격하게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학교 내 미세먼지 알리미 제도를 도입하고, 학교와 현장에서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교 건물 안의 공기 질 역시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뉴시스